

# 흥미진진 공주

2025년 9월호



코스모스 따라 걷는 석장리의 가을 | 금벽로 990

# 의회 소식

## 자치법규 연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 의원연구단체인 ‘공주시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용성)가 공주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 작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연구회는 지난달 4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주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총 668개 자치법규 중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선정했다.

이날 보고회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대표 최인혜)가 수행한 조례 정비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실행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주시 자치법규 연구회’는 이용성 대표 의원을 비롯해 권경운, 윤구병, 서승열 의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과업

수행자로 나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공주시 현행 조례 551개, 규칙 117개 총 668개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연구진은 ▲상위법령 준수 여부 ▲조문구성 및 입법기술 ▲용어 일관성 및 명확성 ▲행정절차 및 위임근거 적정성 등 4단계 체계적 검토를 통해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최종 선정했다.

연구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법정 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례 ▲법령 근거 없이 사무를 위탁하는 조례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는 위법한 특례 규정 ▲입법기술적으로 미흡한 조문 구성 등이 도출됐다. 또한 다수의 위탁 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 관리법령과의 불합치 사항이 발견됐다.

최종보고서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정부 지도·감독 강화에 대응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법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작성되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준용한 체계적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성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우선 정비 대상 조례의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례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안내

일 정 : 8. 25.(월) ~ 9. 8.(월) / 15일간  
장 소 : 본회의장 및 상임위, 특위 회의실  
방청안내 : 041-840-8015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2025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의안 심의

## 의정활동 이모저모



제22회 고마나루 국제 연극제 개막식(7. 18.)



제31회 충청남도강변연체육대외 공주시 선수단 해단식(7. 31.)



전국레미콘운송조합 공주시지부 내방(8. 1.)



공주시-평택시 자매결연 체결식(8. 12.)

## 의당면평생학습센터 고마학습나루 작품전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에 8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의당면평생학습센터 고마학습나루(청룡1리) 천아트 과정 학습자들의 작품 18점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는 의당면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한 청룡1리 천아트 과정에 참여한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 9명의 작품들로 구성됐으며, 어르신들이 기초과정부터 꾸준히 학습하며 경험하신 삶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담아냈다.

천아트는 섬유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예술 활동으로, 이번 전시회는 어르신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작품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임달희 의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며 “공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의회 소식

## ‘하루를 움직이는 길’, 공주시 교통정책의 다음을 묻다



공주시의회 의원  
임규연

길 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다. 공주시 교통정책은 이제 사람을 향하고 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구조, 경제 활동의 효율성까지 도시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인구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생활권 확장이라는 현실 앞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를 움직이는 실질적 동력인 만큼 교통정책 또한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주시의 교통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청소년 대상 무상 대중교통 정책이다. ‘충남형 교통카드’를 통해 하루 최대 3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이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

영도 안정적인 틀을 갖춰가고 있다. 법정 기준에 맞춘 차량 확충, 인접 지역으로의 운행 범위 확대 등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자립의 수단이자 일상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광역교통체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충청권 통합환승요금체계의 시행으로 대전·세종·청주 등 인접 도시 간 이동이 한층 수월해졌다. 공주 시민은 하차 후 60분 이내 최대 3회까지 환승할 수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아졌다. 지역 간 생활권 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앞으로의 진전도 주목된다.

2026년 완공 예정인 공주~세종 광역 BRT는 공주의 교통환경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 교통망이 확대되면 단순한 이동 편의를 넘어 도시 간 자원과 기능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생활 기반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는 도시 간 격차를 줄이고 생활권의 확장을 통해 지역 간 상생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외곽 지역의 교통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 행복택시와 같은 보완정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자 접근성과 운행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 맞춤형 교통수단의 도입이다. 외곽과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에서 소외되기 쉬운 만큼 소형버스나 순환형 노선,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유연한 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둘째, 광역교통의 연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BRT 등 광역교통망 도입을 단순 도시 간 교통 연계 시스템이 아닌 도시 내 교통체계 전반을 새롭게 정비하여 이동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시민 참여 기반의 교통 운영 체계 마련이다. 교통정책은 시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돼 있는 만큼,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단순히 행정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점이자 방향이 되어야 한다. 변화는 현장에서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험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은 종이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와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정책의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공주시 교통정책은 이제 사람을 향해야 한다. 이동이 권리가 되는 도시, 그 변화가 공주시에서 멈추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로 안전을 더하다



공주시의회 의원  
송영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충전 인프라 구축 또한 전국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공간 효율성과 설치 편의성 등의 이유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집중 설치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긍정적이지만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본인 역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위험성을 절실히 느낀다. 화재 발생 시 밀폐된 지하 공간은 연기와 열기가 순식간에 퍼지고 대피가 어려워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변에서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실행하려 했지만, 복잡한 행

정절차와 만만치 않은 이전 비용 등으로 이전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했다.

실제로 2022년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수십 대 차량이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불은 빠르게 번져 대피가 늦어진 주민들이 큰 공포에 휩싸였고 피해액도 막대했다. 또한 지난해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하 충전시설 인근에서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수차례 재발화하며 소방 당국이 장시간 진화 작업을 벌인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하 충전시설의 안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권고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올해 2월 제257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관여하는 ‘관계인’(의무자)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공주시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중이

용시설에는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해 설치 기준이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이번 조례는 중앙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보완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제정 이후 공주시 최초로 우남아파트 전기차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충전 환경을 누리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한 건의 조례가 실제 생활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공주시의회와 공주시는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과 지상 이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통해 더 안전한 공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며,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

